

韓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만에 반등

2017년 4월부터 하락 2018년 12월부터 상승

20개월째 하락하던 한국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CLI)가 반등에 성공했다.

1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 CLI는 98.96을 기록했다. 전월(98.87)보다 0.09포인트(P) 올랐다. 한국의 OECD CLI는 2017년 4월 101.53을 시작으로 20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018년 12월이 돼서야 전월(98.86) 대비 0.01P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애초 OECD는 2018년 12월도 떨어져 2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했다가 이번에 통계를 수정하며 평가를 뒤집었다.

20개월을 끝으로 하락세가 반전되면서 '최장기간 하락' 기록은 경신하지 않게 됐다. 1999년 9월~2001년 4월에도 OECD CLI가 20개월간 하락했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때다.

OECD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

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점은 100. 수치가 100보다 크면 경기 상승으로, 100보다 작으면 경기 하강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준점 아래라 경기는 부진한 상태다.

앞서 OECD는 한국의 경제 전망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6일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한국의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제시했다. 전년 11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제시했던 전망치(2.8%, 2.9%)보

다 0.2%p, 0.3%p 하향 조정했다.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에는 세계 경기 둔화가 있다. OECD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이전보다 0.2%p 낮은 3.3%를, 2020년도 0.1%p 내린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OECD CLI도 저조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전체의 CLI는 2017년 11월(100.55) 이후로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8개월, 중국은 19개월, 일본은 6개월 연속 떨어졌다.

/뉴시스

'재해 예방 안전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못한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 20일 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재해 예방 안전비용 등 의무 전가'를 포함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을 총 5개 유형으로 나눠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등이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항목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목적물의 검사 비용, 산업재해 예방 안전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항목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보장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항목은 하

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 등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관련 취득한 상대방 정보·자료 등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하게 하는 약정도 맺을 수 없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항목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 아래로 잡도록 했다. 제3자를 통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일도 금지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항목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좁게 정하는 약정도 막았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 고시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생명·주소·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도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하겠다"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할 이익을 해치는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북농관원이 지난 11일 전북농관원, 전북도청, 전주시, 완주군,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담당자와 로컬푸드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위해 상생 로컬푸드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 운영한다.

“로컬푸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전북농관원, 지자체·농협·로컬푸드직매장 협업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우려 품목 정보 공유·잔류농약분석·부적합농산물 시중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1일 전북농관원, 전북도청, 전주시, 완주군,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담당자와 로컬푸드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위해 상생 로컬푸드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로컬푸드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부적합 우려 품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분석과 부적합농산물의 시중차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농관원, 지자체, 농협은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연간 4,096건의 잔류농약분석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단속, 친환경 GAP인증 진위여부 등도 병행하여 로컬푸드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단속, 인증품 진위여부 등을 소비자와 함께 참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로컬푸드 농산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되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안전관리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각 시, 군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에게는 계약농가 대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해줄 것과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재배단계에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1월 세금 5천억 더 걷혀... 주요 세목 수입 모두 증가

올해 첫 달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

연초부터 확장 재정을 펼쳐 중앙부처의 재정 집행률이 11%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비의 1/10을 1월 한 달에 집행한 것이다. 이에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총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예산으로 걷어야 할 세금은 총 294조8000억원이다. 이 규모 대비 1월에 걷힌 세금의 비율, 즉 세수진도율은 12.6%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p 낮아졌는데,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낮췄다.

이외에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늘었다. 1월 소득세 수입은 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1월 법인세는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이었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11.4%,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25.4%를 각각 기록했다.

/뉴시스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